아시아리뷰 제12권 제3호(통권 26호), 2022: 9~45 https://doi.org/10.24987/SNUACAR.2022.8.12.3.9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채수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이 글은 산업화가 베트남인의 동아시아 지역(regional)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는 시론(試論)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삶이 베트남의 대외 경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건지어져 왔는지를 개혁개방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해 갔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의 한국 투자공장과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는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을 일터와 삶터에서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민족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다면성, 허구성을 성찰해 본다.

주제어 베트남, 산업화, 개혁개방정책(도이머이),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 정체성 정치, 이주노동

I. 들어가는 말: 산업화와 지역정체성의 관계 다루기의 어려움

이 글은 산업화가 베트남인의 동아시아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는 시론(試論)이다. 동아시아인의 지역정체성을 가늠하는 작업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성을 띠고 있어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쉽지 않은 난제다. 필자에게도 동아시아인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과 실천 행위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어떤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해서 파악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지역정체성을 파악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필자의 지적 한계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학계에서는 세계를 지역으로 범주화하는 시도부터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Said, 1978)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한 동양과 서양은 물론이고 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구분하는 것이 적실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에머슨(Emmerson, 1984)은 동남아시아라는 지역명이 서구인의 눈에 아시아의 주요 거점이었던 인도와 중국의 동쪽이고 남쪽이라는 점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이마저도 2차대전 수행의 전략적 구분을 위해 대중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1] 이에 대하여 솔하임(Solheim, 1985)은 에머슨이 주장한 것처럼 지역의 범주화가 전쟁과 정치전략에 의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허구적 가공물(fiction)이 아니라 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실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지역정체성을 논하기 전에 지역을 구분하는 범주가 특정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구성된 것인지 원초적(primordial) 혹은 역사적 실체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부터 의문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정체성 형성 노력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동북아시아 국가 즉 한국, 중국, 일본이 스스로 동아시아라고 칭하며 아시아 내의 소(小) 제국으로서의 담론을 경쟁적으로 펼쳐 왔지만 이후 일련의 정치·외교적 결정에 따라 동아시아는 소위 아세안+3(아세안과 한·중·일)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범주 변화는 냉전체제가 해체된 직후인 1990년대 초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Mahathir)가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East Asia Economic Group)'을 제안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 3국과 아세안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EAC: East Asian Community)'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어젠다가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박사명, 2008: 12).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후 20년 넘게 유럽공동체(EU)와 같은

1 에머슨에 따르면 아시아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3,000년 전이지만 이도 19세기 제국주의의 등장과 함께 널리 통용되었다(Emmerson, 1984: 2).

수준의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아세안+3국은 경제(금융과 무역 통합), 정치(안보 협력), 사회문화(정체성 함양)의 세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루고 다양한 조치를 실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지역 범주가 역사적 타당성이 있는가와는 별개로, 동아시아지역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의 촉진을 위한 (적어도 정부 차원의) 위로부터의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둘 때 동아시아인의 지역정체성 함양의 정도와 형성 과정을 경제통합 특히 산업화와 연계시켜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고 유의미한 연구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사슬(value chain)로 엮인 자본주의 세계체제 혹은 '세계공장 체제(global factory)'(Rothstein and Blim, 1992) 내에서 협업과 분업의 형태로 진척되고 있는 각국의 산업화 과정이 (여러 종족, 젠더, 계급으로 구성된) 지역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민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반 의식/정체성과 더불어) 지역 안팎의 다른 국가와 타자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을 함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이런 추론이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산업화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지적(知的)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시도되어 온 탐색 방식은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산업화 과정이 역내와 역외의 국가와 연계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통합 정도를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적 토대와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내/역외의 '투자와 기업 활동'(예를 들어, 박번순, 2008), '재정/금융협력'(예를 들어, 이충렬·박철한, 2008), '통상 및 산업협력'(예를 들어, 권율, 2008) 등이 동아시아공동체 내부로의 구심력과 외부로의 원심력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 바 있다.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산업화의 구조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정체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험적 전제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있다.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인간의 경험과 실천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치·경제적 구조와 조건에서 바로 유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 예가 세계체제론, 종속이론, 제국주의론이다

(싱클레어, 2005; 월러스타인 외, 1985; 한국서양사학회, 1996 참조). 구조적 접근을 취하면서 정치·경제적 조건을 절대시하는 이런 이론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동아시아의 산업화를 중심부 자본(기업)의 주변부로의 침투와 부등가 교환에 의한 가치의 유출로 설명한 후에, 주변부 문화의 중심부로의 동화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주변부 계급의 저항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선험적 가정을 상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체이스 던, 1985: 182; Nash, 1981: 407-411). 이런 '문제틀(problematics)'의 논리적 빈틈은 구조적 조건이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방식 혹은 전자를 후자에 대한 설명으로 상승시키는 방식이 정교하지 못한 데 있다. 구조적 조건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경험, 의식, 실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다.

산업화와 지역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역사에 천착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개별국가가 역내와 역외의 국가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교류해 온 과정을 시기별로 기술한 다음 이것이 동아시아 정체성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먼저 7-18세기에 이루어진 해상 무역로를 통한 동아시아지역 안팎의 다양한 봉건국가와의 교류(응웬마잉중, 2011; 응웬반김, 2011), 제국주의 시대의 근대적 교역과 산업의 형성(*Tran*, 2014), 그리고 개혁개방을 전후로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산업화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이어 이러한 역사 기술을 토대로 시기별로 베트남인이 동아시아와 세계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의 한계는 현재 동아시아인이 가진 지역정체성이 이런 역사적 유산과 연계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아쉬움을 남기곤 한다. 물론 역사적 유산이 오늘날 베트남인의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여러 경로(예를 들어, 역사 교육이나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의례적 재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경험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베트남인의 지역정체성이 역사적 전통 혹은 지식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치·경제적/구조적인 접근과 역사적 접근 가운데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이를 오늘날 동아시아인의 경험과 실천과 연결하면서 지역정체성을 논하는 것은 지난(至難)한 지적 작업이 될 것이다. 정체성을 해명하는 시도

는 물질적 조건과 문화적 실천의 연계, 시간과 공간 축의 선택, 다양한 정체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해명, 정체성의 원초적(primordial) 실재와 구성(constitute) 과정의 관계 설정 등이 연계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동아시아인의 지역정체성을 해명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 답을 내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연구 대상을 베트남 산업노동자로 한정하고 몇 가지 단계적 기술을 통하여 정치·경제적 구조를 형성한 역사와 이들의 일상 속의 경험을 연결하여 지역정체성의 내용과 형성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필자가 연구해 오고 있는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삶이 베트남의 대외 경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건지어져 왔는지를 개혁개방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해 갔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지역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다면성, 허구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와 성찰이 베트남 산업화와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길 소망한다.

II. 개혁개방 이전 베트남의 대외의존적 산업정책과 산업노동자의 삶

1. 개혁개방정책(Doi Moi) 이전의 대외 경제 관계와 산업화

동아시아는 늦어도 7~8세기에는 이미 역내 무역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지역 내 소(小)제국을 이루었던 여러 봉건왕조의 주요 항구 혹은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전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의 정치제도, 종교, 이주,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던 명나라 정화(鄭和)의 대항해(1371~1435)는 역내 해양 무역의 패권을 잡는 것이 근대 이전에도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건이다(최형록, 2011).

명나라 환관이었던 정화가 29회에 걸쳐 3만 명 가까이 되는 선원과 함께 거쳐 간 지역은 오늘날 베트남(참파), 태국(시암), 말레이시아(말라카), 인도네시아(자바)는 물론이고 아라비아반도와 동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었다(도모노 로, 2013).

베트남의 봉건왕조도 이러한 해상무역 체제의 일부로 바깥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오늘날 관광객에게는 인도, 포르투갈, 프랑스, 중국, 일본의 상선과 상인 거주지를 볼 수 있는 중부 해안의 호이안(Hoi An)만이 알려져 있으나, 베트남 봉건왕조는 8~18세기에 걸쳐 북동부 해안에 여러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활용하는 바닷길도 현재 확인된 것만 24개에 이른다(응웬마잉중, 2011). 이처럼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역품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봉건시대 해상무역의 주요 대상은 농수산물이나 수공예품이었고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산업과 노동의 출현은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로소 목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국주의 시대에도 식민 통치를 받았던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근대적 자본주의 노동시장이 점차 형성된 데 비하여 근대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게 발전하였다.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프랑스 인도차이나(Indochina) 식민지의 일부였던 베트남 지역의 인구는 1930년대에 2,0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이들의 절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였다(Fforde and De Vylder, 1996: 72). 이 가운데 베트남인이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의 형태로 고용된 곳은 고무와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plantation)이었을 뿐이며 근대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0.4-0.5%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Fforde and De Vylder, 1996: 73).

2차대전 종식과 함께 '독립'을 성취했지만 이어진 분단과 20년간의 내전(1955~1975)으로 베트남의 근대적 산업발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북베트남은 미국의 공습으로 산업기반이 초토화되었으며, 남부 베트남도 포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사이공(현 호찌민)과 인근 동나이(Dong Nai)성에 소규모 산업시설을 근근이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 결과 베트남 공산당이 전쟁의 명분으로 반(反)제국주의와 함께 노동계급의 해방을 부르짖었지만, 통일 이전 베트남 경제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이나 소상인이었다. 실제로 개혁

개방 정책을 실행하기 이전 시기에 베트남의 농업 부문 고용은 73%에 달했고(권율, 1999: 13), GDP 대비 농업의 비중도 40% 가까이 되었다(이한우, 2011: 40; 오하나, 2022: 6 재인용). 이처럼 통일 이후 사회주의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베트남에서는 근대적 산업노동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대외 경제 관계가 산업노동자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지역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따질 수 있는 계제(計除)가 아니었다.

산업노동자가 대외 경제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성찰해 볼 기회가 처음 찾아온 것은 급진적으로 공산화를 시도한 소위 '강성 개혁(hard reform)' 시기부터다. 통일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한 1980년대 중반까지의 강성 개혁 시기는 베트남 산업노동자에게 이와 관련한 두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나는 중국계 베트남인 혹은 '화교(Hoa Kieu 또는 Nguoi Hoa)'의 축출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을 필두로 한 '코메콘(COMECON)' 회원국의 원조다.

베트남 정부는 통일 직후인 1975년 강제적인 '마오쩌둥식(Maoist style)' '산업 국유화(industrial nationalization)'를 전격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500개의 사영기업을 650개의 국영기업으로 재편하였는데 소유권을 빼앗긴 자본가의 절대다수는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당시 산업의 80%를 장악한 중국-대만계였다(Vo, 1990: 59-72). 주로 화교 자본가를 겨냥한 산업 국유화는 베트남 정부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사뭇 다르게 중국인의 경제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산업노동자에게 남겼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이 1979년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중국이 지지하던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베트남과의 국경지대 성(省)들을 포격하여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 결과 베트남과 중국은 서로 적대감을 감추지 않는 이웃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서방과 중국의 지원이 단절되자 베트남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 1978년 가입한 '코메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1990년대 초까지 베트남 산업은 코메콘의 도움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대외 의존성과 종속성이 심각했다. 페트라소비츠(Petrasovits, 1988: 215-216)에 따르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 감행된 1979년까지 코메콘은 베트남 대외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수치가 1981년에 이르면 85%까지

증가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베트남 수입품의 90%가 코메콘 회원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의존적 무역구조 속에서 베트남은 산업생산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재가 부족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메콘 국가 특히 소련의 극동(極東)이 필요로 하는 고무, 채소, 과일 등을 기일에 맞추어 수출해야만 했다(랑글레·꽈익, 2017: 106). 공업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농산물과 광물로 채무를 갚아야만 했다. 이 시기의 코메콘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과 이로 인한 불안정성은 베트남이 추후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더하여 노동력을 수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초까지 약 30만 명 정도가 소련과 동유럽으로 노동 이주를 떠났다(랑글레·꽈익, 2017: 107). 일부는 건설 붐이 한창이던 중동의 이라크로 가기도 했지만, 당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대표적 이주국은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개방정책의 실행 이전과 초기, 즉 아직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던 시기 동안 베트남 산업은 동아시아 역외의 공산주의국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재생산을 거듭하였다. 이 같은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상황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경험과 이들이 다른 지역(region)과 국가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베트남 산업노동자에게 기술을 습득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소비에트 연방과 일부 동유럽 국가였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 역내와의 교류와 이를 매개로 한 지역정체성의 구성(construction)은 아직 본격적으로 싹트지 않았다.

2. 사회주의 산업노동자의 작업장/일상에서의 삶과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개혁개방 이전, 특히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급진적 개혁 추진 시기에 베트남 산업노동자는 전후(戰後)의 극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외의존적 무역구

조의 영향을 받으며 삶을 꾸려 나갔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산업노동자의 경제적 삶도 궁핍했지만 다른 부문과 직종 종사자와 비교할 때 이들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쟁 후유증과 전쟁 직후 기존에 받아 오던 대외원조의 단절로 인하여 공산당 간부도 생계를 걱정하던 시절에 이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Nguyen and Huu eds., 1998: 160).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정부는 노동자 국가라는 통치이념을 강조하면서 산업노동자를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계급으로 간주하였고, 배급에서도 선차적으로 고려하였다. 필자가 면담한 은퇴 산업노동자에 의하면, 당시에는 "공장에서 우수 노동자(소위 노동 영웅)로 선정되면 매년 자전거 바퀴를 한 짝만 주어 여러 해 동안 연속으로 상을 받아야 가까스로 자전거를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소비재가 부족했지만, 확실하게 생계는 보장되는 공장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연줄을 동원해야 했다.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고충인 식량 부족과 소비재 기근은 무엇보다 당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중공업 우선 정책과 농업 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Vo, 1990: 72-85).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았던 사회주의 국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도 소비재 부족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삶을 경제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노동자는 다른 인민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살다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경험해야 했던 남부인이건, 먼저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북부인이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내해야 했던 농민이건,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을 누리던 산업노동자이건 해외로 탈출할 꿈을 꾸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실제로 1978년과 1979년 사이에 베트남을 떠난 50만 명의 소위 '보트피플(boat people)' 가운데 20% 이상은 북부 출신으로 추정되며(랑글레·꽈익, 2017: 71-72), 이 중에 산업노동자의 가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베트남 산업노동자에게 다른 지역 특히 미국과 유럽은 수익성 높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전의 시기에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어려움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산업현장에서는 계획경제의 자원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관료주의적 통제로 인하여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를 사회주의 특유의 '결핍 경제(shortage economy)'(Burawoy and Lukacs, 1992: 18)라고 부른다. 베트남의 산업현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핍이 더욱 심각하였다. 생산설비 부품과 원자재의 다수를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으로 인하여 부품과 원자재가 부족할 때는 쉬고 조달이 원활할 때 "폭풍처럼 몰아쳐서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불규칙한 생산 일정과 노동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물론 '결핍 경제'에서 나타나는 '몰아치기 생산(storming production)'(Jovitt, 1992)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일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 반, 팀 단위의 단합이 긴요했고 동료의 동의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동과정 안팎에서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팀별로 생산목표 인지와 역할 분담을 위한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 현장에서 이러한 정치과정이 일상화되어 있어 노동자가 강압보다는 동의에 기반을 두고 일하고 있다는 자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Burawoy and Lukacs, 1992).

개혁개방 이전에 베트남에 존재한 사회주의 '공장 레짐(factory regime)'(Burawoy 1985)의 이 같은 정치과정과 노동과정이 소련과 동유럽을 필두로 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무역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또한, 당시 베트남 노동자가 사회주의 '공장 레짐'을 선호했는지와는 별개로 이들이 부품과 원자재를 불규칙하게 공급해 주는 국가에 대한 불만을 수시로 표출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을 타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적대감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소련과 동유럽처럼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대립(against)을 초래한 국가에 대한 불만이 동아시아와 같은 특정 지역을 지향(for)하는 정체성의 형성으로 귀결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사회주의 공장 레짐 내에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부품과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베트남 노동자가 생산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오히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형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하

지만 이를 매개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판적 적대감이나 우호적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이를 보여 주는 주목할 만한 사건과 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소련과 동유럽으로 이주노동을 갈 기회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다.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의 이주노동은 현금을 얻어 부를 축적할 드문 기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던 베트남에서 해외 이주노동은 경쟁이 엄청나서 웬만한 연줄이나 기술을 가지고는 갈 수 없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단순히 베트남과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종속적인 무역 관계에 천착해서 양자의 적대감을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실성이 없어 보인다.

베트남 산업노동자는 근대적 산업이 부재했던 봉건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시대에도 아직 존재가 미미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이 마무리되고 사회주의 '경성 개혁(hard reform)'이 추진되면서 비로소 자본주의적 '국제 노동 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Frobel, Heinrichs, and Kreye, 1980)에 대립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세계 생산체계에 편입되면서 제대로 된 근대적 산업노동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정치·외교적 대립으로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중국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동아시아지역 내부에서 산업노동과 생산물 무역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매개로 동아시아 역내의 다른 국가를 경험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지역정체성을 성찰해 볼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다.

III.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의 대외의존적 산업정책과 산업노동자의 삶

1. 산업화, 노동계급의 형성 그리고 외국자본의 성격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도이머이(Doi Moi)'의 계기와 과정을 다룬 여러 연구(대

표적인 예로, 이한우, 2011; 랑글레·꽈익, 2017; Vo, 1990; Fforde and Vylder, 1996)가 강조하는 요체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던지고 사영화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이다. 베트남은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주체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 농업 주도의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산업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셋째,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늘리며 세계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한편으로, 베트남을 '세계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저가 생산품 핵심 기지로 발돋움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내 자본과 노동의 대외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1979년 제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언한 "혁명적인 열정보다 현실의 객관적 법칙 따르기"는 궁극적으로 사영화, 시장경제로의 편입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에 연결 혹은 종속된 산업노동자 양성 과정이었다.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크게 소유 형태(ownership), 부문(sector), 업종(business type)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관계(relations of production)'와 구체적 노동 형태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베트남 산업구조의 변화는 개혁개방 당시 국민소득의 50%와 생산인구의 70%를 차지하던 농업 부문과 국민소득의 30%와 생산인구의 15%를 차지하던 국영 소유 형태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Fforde and Vylder. 1996: 92-95). 90년대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농업 부문 노동력을 산업적 노동시장에 편입하고 동시에 소비시장의 소비자로 전환하는 '포디즘(Fordism)적 전환'(Ortner, 2011)을 시도한 것이다.

베트남 산업구조의 포디즘적 전환은 농업에서 제조업(2차 산업)과 서비스업(3차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야기했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고용과 GDP 기여도의 심한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졌다. 개혁개방정책 초기인 1990년에 농업은 전체 고용의 72%를 차지했으나 GDP 기여도는 32%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농업의 GDP 기여도는 23%로 줄었으나 고용률은 68%로 여전히 높았다(Tran and Doan, 2010: 3). 농업 부문은 GDP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면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고용을 중심으로 보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노동력을 산업 부문보다 서비스 부문이 더 빠르게 흡수했다. 그 덕택에 서비스 부문의 고용률은

표 1 부문별 연간 고용 증가율 추세

부문	농업	산업	서비스	경제
1987~1989	1.51	2.03	3.47	1.84
1990	2.78	-18.09	15.47	1.63
1991~2000	1.55	3.01	4.53	2.24
2001	-5.58	22.19	19.21	2.66
2002~2009	0.04	7.74	4.78	2.52
1987~2009	0.76	4.44	5.59	2.28
1990~2009	0.65	4.80	5.91	2.34

출처: Tran and Doan(2010: 4).

1990년 약 16%에서 2000년 약 19%로 증가했는데, 이는 이 기간에 창출된 일자리의 약 3/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Tran and Doan, 2010: 5. 표 1 참조).

예상보다 느리게 진척되던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개혁개방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줄면서 2차 및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약 2배로 증가한다(권율, 2008: 42).[2] 특히 이 시기에는 도시화의 가속화와 외자기업이 주를 이루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의 성장으로 2차 산업의 고용률(19.2%)과 GDP 기여율(41.5%)이 모두 빠르게 증가한다.

이러한 가속화에 힘입어 2020년에 이르면 각 부문의 GDP 기여도는 1차 산업 13.5%, 2차 산업(제조업/건설업) 53%, 3차 산업 33.5%로 변화한다(김윤진, 2022). 또한 2021년 기준 4,900만 노동자 중 1차 산업에 1,410만(28.2%), 2차 산업에 1,610만(32.3%), 3차 산업에 1,970만(39.5%) 명이 종사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된 것이다(한국무역협회, 2021).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 한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노동자의 창출은 베트남 사회에 자본과 마주하며 대립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2 2007년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노동력 고용 비율은 각각 19.2%와 28.6%로 증가하며, 그 결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 비율은 52.2%로 급감하게 된다.

표 2 2020년 국유, 비국유, 외국인직접투자 부문 부가가치액과 고용 비중

자본의 성격과 비중	국유	국내 비(非)국유	외국인직접투자
부가가치액 비중(%)	27.26	42.81	20.13
고용 노동자 수 비중(%)	7.64	83.6	8.83

출처: 2022년 통계총국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이에 더하여 베트남이 글로벌한 성격을 지닌 외국자본의 직·간접 투자를 유치하여 주요 산업을 성장시킴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에는 계급의식만이 아니라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정서와 의식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국적과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통계총국(Tong Cuc Tong Ke)은 매년 산업구조를 국유, 비국유, 외국인직접투자로 나누어 소유 형태별 산업구조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해외직접투자는 부가가치 생산액의 20%가량 그리고 고용 노동자의 약 9%를 만들어 내고 있다(표 2 참조). 이를 2010년도 통계와 비교해 보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외국자본의 고용 노동자 수는 2배가량 늘었고 부가가치 산출량도 33% 정도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에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기간에 규모와 영향력이 큰 외국자본이 유입되며 자본집약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투자한 산업이 아직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표 3 베트남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상위 5개 업종 (단위: 10만 달러)

구분		2022년 3월 20일 기준 누계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1	제조·가공	15,657	250,720.63
2	부동산경영	1,018	64,963.03
3	전력 가스·용수 제조 및 공급	179	36,380.52
4	호텔·외식 서비스	899	12,728.04
5	건설	1,775	10,936.54

출처: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FIA).

표 4 국가별 베트남 투자 누계 (단위: 10만 달러)

구분		2022년 3월 20일 기준 누계	
연번	국가	건수	투자금액
1	한국	9,265	78,565.18
2	싱가포르	2,866	67,564.33
3	일본	4,828	64,410.61
4	대만	2,860	35,857.43
5	홍콩	2,065	28,553.98
6	버진아일랜드(영국)	887	22,099.00
7	중국	3,372	21,964.21
8	네덜란드	380	13,559.00
9	태국	652	13,037.83
10	말레이시아	669	12,848.02
11	미국	1,165	10,433.81
합계		34,815	422,835.16

출처: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FIA).

성격을 띠고 있어, 이들을 현장에서 마주하고 갈등하는 베트남 노동계급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 노동자 수가 많고 동시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가공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그 결과 노동계급이 계급, 민족, 종족, 지역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외국자본과 대립하고 갈등할 잠재력이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베트남에 투자한 자본의 절대 비중이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표 4 참조). 2022년 초까지 베트남에 투자한 액수가 큰 나라는 한국, 범중국계(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일본이다. 국적만 빌린 회사가 많은 버진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상위 7개 국가가 모두 범(凡) 한·중·일 자본이며,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일하게 10위 권 안에 속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적 노

동계급의 형성을 목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우위를 앞세워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주도한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동아시아 역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가치사슬에서 바이어(buyer)가 서구에 집중해 있는 반면, 제조와 가공을 담당하는 벤더(vendor)와 하청기업(sub-contractor)은 동(북)아시아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제조업 위주의 동아시아 중진국의 자본이 투자할 곳이 베트남과 같은 노동력이 풍부한 신흥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이 산업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친밀성보다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의 발전 정도와 분업체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중요한 점은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든 베트남의 산업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역내의 정치·경제적 연관 관계와 의존성이 급격하게 진전하고 심화하였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산업화가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경험과 의식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상상하고 구성하는 방식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나 역내 이주노동을 통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산업노동자의 삶의 경험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외국계 기업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경험과 '정체성의 정치'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외국자본과 마주하고 외국인과 함께 노동하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장(arena)은 일터다. 이들이 이러한 장에서 외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를 벌일 수 있는 기회는 주로 두 경로를 통해 주어진다. 하나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공장에 근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는 것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산업노동자는 일터에서 펼쳐지는 일상에서 친밀성(intimacy)과 적대감(antagonism)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표 5 베트남 시기별, 지역별 파업

기간	호치민시		동나이		빈즈엉		그 외		계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1995~1999	71	54	54	17	55	17	37	12	317
2000~2004	217	41	102	19	112	21	94	18	525
2005~2009	504	25	444	22	525	26	558	27	2,031
2010~2014	634	25	457	18	600	23	870	34	2,561
2015~2017	178	18	79	8	192	20	519	54	968
계	1,704	27	1,136	18	1,484	23	2,078	32	6,402

출처: Dung 2020.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감정, 견해를 형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외국계 경영진/관리자와 일터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상대를 타자화하고, 갈등을 표출하면서 상호 연계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큰 대척점은 계급적 이해관계다. 외국계 경영진과 베트남인 노동자의 이러한 계급적 이해관계와 대립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는 계기는 파업일 것이다.

베트남의 파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의 높은 빈곤율,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초과 수요, 집단행동에 대한 공안(公安)의 강한 규제가 맞물리면서 파업 발생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어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노동자는 정부가 금기시하는 파업 감행을 주저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가구 경제(household economy)'가 악화하면서 파업이 점증하게 된다. 이후 파업은 2000년대 말에 정점을 찍고 증가세를 멈추었지만, 2010년대에도 꾸준히 노사갈등의 주요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표 5 참조).

일반적으로 파업은 국제 시장의 경기와 국내 물가 등의 경제적 변수, 노동 관련 제도와 법 등의 정치적 요인, 그리고 사회 조직과 문화적 관념의 특징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채수홍, 2013). 베트남 산업노동

표 6 소유 형태별 베트남 파업, 2017~2019

연도	국유 부문		국내 사유 부문		해외직접투자 부문		계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2017	0	0	84	26	254	74	329
2018	0	0	57	27	157	73	214
2019	0	0	17	14	104	86	121
계	0	0	158	24	506	76	664

출처: Dung(2020).

표 7 베트남 파업의 국적별 현황, 2017~2019

연도	대한민국		대만		일본		중국		기타 국가		계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2017	113	46	60	24	11	4	20	8	41	36	329
2018	58	37	40	25	9	7	26	17	24	41	214
2019	43	41	19	18	6	7	25	24	11	26	121
계	214	42	119	24	26	5	71	14	76	36	664

출처: Dung(2020)

자의 파업은 이러한 일반적 요인 이외에도 몇 가지 경향이 두드러진다. 첫째, 압도적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한다. 융(Dung, 2020)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베트남 파업의 74~86%는 '해외 직접 투자(FDI)'기업에서 일어났다(표 6 참조).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국내 사유 부문에서 파업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기업 위주의 파업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대만 기업의 파업 건수가 압도적인 1, 2위이고 그 뒤를 중국과 일본 기업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7 참조). 동아시아 역내 국가에서 진출한 기업에서 대부분의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 파업은 섬유, 의류, 신발, 가방 등 봉제 산업에서 절반 가까이 그리고 피혁, 전기, 목재 가공 업종 등에서 나머지가 발생한다(표 8 참조).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파업은, 극

표 8 베트남 파업의 업종별 현황, 2017~2019

연도	섬유의류		피혁		전기		목재		기타 산업		계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비중(%)	수(회)
2017	167	51	46	14	15	5	24	7	77	23	329
2018	84	39	44	21	21	10	12	6	53	25	214
2019	50	41	15	12	9	7	8	7	39	32	121
합계	301	45	105	16	45	7	44	7	169	25	664

출처: Dung(2020)

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주동자를 드러내지 않는 '살쾡이 파업(wildcat strike)'을 형태를 취한다.

이상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베트남 파업의 절대다수는 '세계 자본주의 생산체계' 내 노동집약적 저가 생산품의 주요 생산자인 한국과 대만 기업에서 발생한다. 정치적, 조직적 토대가 부족한 베트남 노동자가 가능하면 파업을 주저하고, 불가피할 때도 살쾡이 파업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베트남 노동자의 불만, 갈등, 적대감이 일상에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 노동자의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계급적 대립을 넘어 민족적 적대감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역내 각국 정부, 기업, 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채수홍, 2008).

파업의 주요 발생지인 한국 기업에서 노사갈등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파업으로까지 이르는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절대다수의 파업이 그러하듯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서 일어나는 노사갈등은 정치적 권리의식보다는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Lee, 2006). 노동조건과 복지를 개선해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종종 등장하지만,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의 의견 차이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회사와 노동자가 서로 금전적 이해의 상충 때문에 반목(反目)하는 것이다. 파업이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구정(Tet) 전에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은 경기 하락, 재정 악화, 인건비 상승 지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는 물가상승과 소비 증가로 인한 가구 경제 악화로 힘들어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 노사갈등과 파업은 자본과 노동의 근원적인 경제적 이해 상충, 즉 계급적 이해 차이에 토대를 두고 있다.

노사갈등의 이 같은 계급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경영진과 베트남 노동자는 갈등 상황과 이후의 일상에서 서로의 불만을 단지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서로를 겨냥하는 담론은 계급보다는 오히려 민족 정체성과 연관된 언어로 표출된다. 이러한 점은 '국제 노동 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고 있는 '세계 공장(global factory)'(Rothstein and Blim, 1992)에서 계급보다는 인종, 민족, 종족과 연관된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가 소구력(訴求力)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인류학자인 필자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방문할 때 한국인 경영진으로부터 베트남인의 전통문화와 민족성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필자가 베트남의 노사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더욱 이 질문을 피하기 쉽지 않다. 베트남 노동자의 요구와 저항이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경영진은 이를 민족 문화와 민족성의 귀결로서 해석하고 싶은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베트남 노동자와 노사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와 협상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베트남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믿음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독특한 '공장 체제(factory regime)'의 구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계 노동시장이 민족에 따라 '지역화(regionalization)', '분절화(segmentation)'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국적 공장이 자국민(종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McDowell, 2008).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기업은 동족을 신뢰하고 선호하는 정도가 남다르다. 거의 예외 없이 한국 기업은 경영진은 물론이고 현장의 주요 관리와 핵심 기술자는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공장 체제 내의 정치과정에서 한국인은 직급과는 별개로 베트남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공장 레짐 내에서 전개하는 이 같은 '정체성의 정치'는 현지 노동자의 민족적 반감을 만들어 내곤 한다(채수홍, 2003: 169-172).

마찬가지로 베트남 노동자가 노사갈등 과정에서 한국 기업 경영진의 행위와 결정을 해석하는 방식도 민족 문화와 성격에 대한 '정형화(stereotyping)'된 담론

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뿐 아니라 "급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며 노사협상을 실행하는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베트남 노동자가 자본가의 욕구와 노동 통제에 대한 성찰보다는 민족에 바탕을 둔 '정체성의 정치'에 몰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 결과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다국적 공장 체제의 경험은 단순히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계의 차이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다른 민족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 문화정치의 자원으로 변환되고 축적된다.

유사한 문화정치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민족과 연관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실천을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경로는 해외 이주노동이다.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해외 이주노동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역내 이주는 이들에게 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타국으로 건너가 노동을 하

표 9 동북아의 베트남 이주노동자 현황, 1992~2016

연도	이주 노동자 수	대만		일본		한국		대만, 한국, 일본 합계	
		노동자 수	비율(%)	노동자 수	비율(%)	노동자 수	비율(%)	노동자 수	비율(%)
1992	1,031	0	0	0	0	216	20.9	216	20.9
1995	12,849	52	0.4	433	3.4	9,561	74.4	10,046	78.2
1999	21,810	558	2.6	1,856	8.5	4,518	21	6,932	32.1
1992~1999 평균	12,140	367	2.6	1,580	7.6	4,097	34.5	5,616	44.6
2000	31,500	8,099	25.7	1,497	4.8	7,316	23.3	16,912	53.8
2003	75,000	29,069	38.8	2,256	3.0	4,336	5.8	35,661	47.6
2007	82,020	23,640	27.8	5,517	6.5	21,187	14.3	41,344	48.6
2014	106,840	62,124	58.1	19,766	18.5	5,500	5.1	87,390	81.7
2016	126,296	68,244	54.0	39,938	31.6	8,482	6.7	116,664	92.3
2010~2016 평균	98,776	48,807	49.4	16,729	16.9	8,355	8.4	73,891	74.8

출처: Nguyễn(2022).

지만, 이주국뿐 아니라 송출국인 고국과 연계해서도 여러 사회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며 그 결과 타국과 타민족에 대한 감정과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주노동 과정에서 겪은 법적, 제도적, 정치·경제적 여건과 차별을 떠올리며 동아시아인의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한다(채수홍, 2007).

개혁개방 초기인 1992년 베트남의 해외 이주노동자는 1,031명에 불과했다. 이후 1995년에 1만 명을 처음 넘어선 후 2003년에는 5만 명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표 9 참조). 이처럼 베트남인 해외 이주노동자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대만, 일본, 한국에서 노동집약적인 3D 산업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베트남 해외 이주노동 전체의 20.9%에 불과했던 3국의 비중은 2003년에는 47.6%, 2014년에는 무려 81.7%로 증가하게 된다. 3국 가운데는 대만(1992~2016년 평균 49.6%)과 일본(평균 16.9%)이 수입한 베트남 노동자 수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평균 8.4%)도 동(同)기간에 '산업연수생 제도'(1993~2003)와 '고용허가제'(2004~현재)를 통하여 연평균 8,355명의 베트남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베트남인 총취업자 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7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한국 체류 베트남인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16만 명, 2021년에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절대다수가 한국에 온 공식적 목적(예를 들어, 결혼, 유학, 관광)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인 해외 이주노동의 절대다수는 동아시아 역내(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베트남

표 10 베트남인 한국 취업자 수, 2012~2019 (단위: 1,000명)

연도	베트남인 취업자	연도	베트남인 취업자
2012	79.1	2016	70.8
2013	73.0	2017	66.3
2014	70.8	2018	79.0
2015	74.2	2019	77.2

출처: 법무부 출입국통계를 토대로 작성.

표 11 한국 체류 베트남인 수, 2017~2021

구분	베트남인
2017	169,738
2018	196,633
2019	224,518
2020	211,243
2021	208,740

출처: 법무부 출입국통계를 토대로 작성.

인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정체감과 역내 개별국가에 대한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베트남 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다룬 연구(예를 들어, 설동훈, 1998; 채수홍, 2007)에 따르면 이들은 일터와 삶터에서 한국인과 피상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민족 내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종의 초기 형태의 게토(ghetto)를 형성하기도 한다(박배균, 2004). 서울의 동대문 의류상가 인근과 안산, 부천, 마석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모여 사는 거주지와 베트남 식당을 비롯한 편의 시설을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이국에서 열악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고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 곳곳의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일 것이다.

민간단체(NGO)나 종교 단체 등과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인은 스쳐 지나가는 타자에 가깝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이들의 노동이 일상을 즐기기에는 너무 고되다. 이구동성으로 이들은 "잠자기에 바쁜"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문화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인과는 언어 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다. 대다수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저학력일 뿐 아니라 초보 수준의 한국어 강좌만을 의무적으로 수료한 채 한국에 들어온다. 하여 이들은 여유 시간을 확보해도 "관광객처럼" 한국과 한국인을 접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이들은 일상 공간 혹은 삶터에서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으로부터 드물게 차별을 경험하며 일상에서 조우하는 한국인이 그리 불친절

하지 않다고 진술하곤 한다.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이처럼 한국인에 대한 경험을 피상적으로 하는 데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2018년 한국의 불법체류자가 35만 5,126명이며, 이 가운데 베트남인이 4만 2,05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베트남인 취업자 7만 9,000명의 50%를 넘는 수가 미등록 상태다.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이런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라도 한국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듯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이주국의 정책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주국 시민과 대면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민족/종족 내부에서 서로 협력하고 갈등하면서 고충을 내부에서 해소하곤 한다(박경태 외, 1999; 벵카테시, 2013). 삶터에서 형성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견해도 이런 한계 속에서 형성된다.

베트남 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경험은 이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이들은 한국인이 외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강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뎌내야 한다. 여기에 한국인 경영주나 관리자의 강압적인 노동 통제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이들이 이전 사업장에 적대감을 표시하며 자주 이직하고 불법체류를 감행하는 연유로 이런 사실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일터 내의 한국인과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며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고운 정, 미운 정"을 모두 쌓는다. 그 결과 베트남 산업노동자는 한국의 일터에서 비로소 한국인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복합적 이미지, 감정, 견해를 형성해 간다.

베트남 해외 이주노동자가 동아시아 역내 이주국에 대하여 형성하는 인식과 이들이 실행하는 '정체성의 정치'는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 산업노동자의 사례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양자 모두 일터 밖보다는 일터 내의 정치과정에서 외국인 경영진/관리자의 타자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 또한, 노동권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다른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반발하기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 내 정치과정을 통하여 민족/종족적 감정과 인식을 형성한다. 무엇보다 일반적 추론과 달리, 기업 내에서 계급적 이해의 상충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주로 민족/종족과 관련한 '정체성의 정치'의 틀 내에서 해석

하고 대응한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일하건 한국에서 일하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산업노동자는 합당한 조건의 일자리와 노동을 갈구하지만,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는 공장 밖의(특히 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구조적·제도적 조건을 "간파(penetration)"(Willis, 1981)하기보다는 공장 내 경험을 토대로 민족/종족과 연계된 '정체성의 정치'에 몰두한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외국 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구조적 조건과 원인에 대한 타당한 인식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다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감으로 전이되고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IV.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경험과 동아시아 정체성의 원심력/구심력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 가능성은 역내 국가의 기업에서의 경험만으로 추론할 수 없는 복잡한 함수 속에 놓여 있다. 지역정체성은 타국과 타자에 대한 개인·집단적 경험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안팎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문화정치를 거쳐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여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경험과 지역정체성의 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은 적어도 필자와 같은 문화인류학자의 눈에는 복잡하고 난망하다.

필자는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힘과 조건을 선별하고 이의 작동방식을 탐색하는 시도가 이처럼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시나브로 푸는 데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을 이미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갈 지향점"(박승우, 2011: 97) 혹은 형성 가능성이 있는 미래로서 접근하면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이자 구심력은 원초적(primordial)인 역사·문화적 기초가 없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해 내

려는 위로부터의 노력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2000년대 초부터 한자(漢字)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국가(아세안+3)가 모여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심화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도 역내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해진 데서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역내에 자유무역지대와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담론에 설득력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전후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진입하면서 동아시아 중심의 패권에 대한 담론이 다시 등장했으며 이를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건설로 현실화하자는 주장까지 대두하였다(김기석, 2015: 25-35).

경제와 정치·안보 분야의 현실적 긴요성 때문에 시작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상관성을 찾아내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함양할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내 공동체에 찬성하는 정치인과 학자를 중심으로 '아시아적 가치', '유교문화권', '동아시아 자본주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등의 담론이 제기되었고(박승우, 2011:64), 민관(民官)이 참여하는 다양한 외교 회의(예를 들어, EAVG, EAS, NEAT, NEAS 등)에서 동아시아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동아시아 사회문화공동체 구축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가면 된다는 논리가 통용되는 경제와 정치·안보 분야와 비교할 때, 역사적 정당성과 당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가령 동아시아가 문화적으로 하나로 묶일 만한 동질성과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지 물으며 지역정체성 형성 가능성에 회의감을 표시하는 부류와 역사-문화-정체성이 모두 시대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어 온 산물이라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박승우, 2011: 77).

이런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동아시아 사회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문화 분야의 사업이 경제와 정치·안보 분야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이는 동아시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당위성과

지향점은 복잡하고 애매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인정한다는 원칙만 고수한다면, 상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아세안+3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정체성 함양 사업'의 주최자의 다수는 기획한 문화 행사를 통해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손쉽게 자평한다. 이와 함께 각국 문화산업이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벌이는 다양한 사업도 역내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적 동질감을 양성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다. 역내 각국 정부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촉진 사업이, 실제 정체성 함양의 효과와는 별개로, 역내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선호한다.

문제는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을 위한 위로부터의 이러한 노력과 자평(自評)이 아래로부터의 인식 및 경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아래로부터의 교류와 협력이 끊임없이 지역정체성에 대한 이중적, 양가적(兩價的) 인식과 실천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국내외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일터의 노동을 매개로 동아시아 역내 국가, 기업, 국민/민족/종족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과정은 문화적 동질감과 상호이해 못지않게 문화적 이질감과 적대감을 생산한다. 물론 정도는 덜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일터 밖에서의 경험도 이와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모순된 효과를 낳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학계의 비판을 받았던 문화 결정주의, 본질주의(essentialism), 원초주의(primordialism)가 아닌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토대를 두고 있다(박승우, 2011: 82). 또한 무조건적 동질화를 위한 시도라기보다 다양성, 이질성, 개방성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인이 아래로부터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역내 다른 국가, 국민, 문화는 이질성, 다양성, 개방성을 토대로 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보다는 타자성을 생산하는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체성의 정치'는 견고한 정치·경제적 구조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휘발성과 변동성이 심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민족적 반

감으로 어떻게 전환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인종, 민족, 종족, 젠더에 초점을 둔 '정체성의 정치'로 전환하여 "우리"보다는 "남"이라는 의식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체성의 정치'는 역사에 대한 기억의 정치, 정치·외교적 충돌, 사회문화적 사건에 의해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역내 다른 국가와 얽힌 역사 해석, 영토 분쟁, 스포츠 경쟁이 일상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고 있는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정체성을 쉽게 흔들어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재구조화'(카스텔, 2003: 45)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지구화는 일국과 특수한 지역(region)을 초월하는 '초국적(transnational)' 정체성을 만들어 냄으로써 동아시아인의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원심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오늘날 동아시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역내에 묶어 둘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 있다.

'시공간 압축'(Harvey, 1990)을 가속화하고 있는 교통-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작금의 전 지구화(globalization)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를 필자의 방식으로 분류해 보면, 1) 정보 자본주의의 발전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2) 후기 자본주의로의 변화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사회로의 변모, 3) 질병/환경/범죄 등의 확산으로 고통받는 위기사회의 출현, 4) 신자유주의적 개인화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집단 정체성의 약화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변동의 영향이 세계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는 지역별 국가별, 집단별로 매우 차별적이어서 오직 맥락적 이해를 동반할 때 실상을 읽어 낼 수 있다.

'초국적 정보 자본주의(transnational informational capitalism)'(Fuchs, 2009)의 비약적 발전과 '네트워크 사회'의 만개는 인간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자아와 '정체성의 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카스텔, 2003: 46-50). 네트워크 사회에 사는 베트남 산업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회사의 이윤추구 방식 변화, 기술혁신과 조직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동유연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아, 개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젊은 노동력을 자랑하는 베트남의 산업노동자가 계급,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정체감보다는 주체적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스텔(2003)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사회는 초국적 상호소통을 강화하면서도 국지적 정체성(예를 들어, 민족/종족주의)까지 무력화하지는 못한다. 교통정보통신 기술이 세계인의 거리를 좁히고 세계시민주의 이념을 확산시키지만 동시에 기존 집단 내의 소통도 강화되어 이들의 이념이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하여 정보 자본주의와 네트워크 사회가, 기존의 국민/민족/종족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형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미약하다.

오랜 역사와 함께 한 전 지구화가 전례 없는 속도와 힘으로 사회문화적 변동을 몰고 온 것은 후기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다. 후기 자본주의의 핵심은 탈산업화에 따른 생산(자) 중심사회의 소비(자) 중심사회로의 탈바꿈이다(Bell, 1973). 생산자로서보다 소비 양태와 역량에 따라 집단이 나뉘는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 토대가 분명한 계급 정체성이나 지역정체성보다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소비 취향이 집단을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자본과 노동의 협약이 깨지는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과 복지국가가 책무를 시장에 전가하는 네오-케인지언(Neo-Keynesian) 정책이 결합한 신자유주의 이념은 집단보다 개인이 '정체성 정치'의 단위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다(Ortner, 2011). 전 지구화의 특징적 사회문화적 변동 요인으로서 후기 자본주의의 도래와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이처럼 계급과 특정 지역에 정박해 있던 정체성을 개인의 문화적 취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노동자도 이러한 흐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이들도 때때로 생산보다는 소비 그리고 집단보다는 개인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서술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삶의 조건과 실천 양태를 반추해 보면 이런 가정에 과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기업에서 일하건,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주노동을 하건 베트남 산업노동자는 소비에서 정체성을 추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을 향유(享有)하지 못하다. 이들은 열악한 물질적, 정치·경제적 조

건을 감내하며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터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더욱이 탈산업화가 진행된 선진 서구 국가와 달리 뒤늦게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주변부 국가 베트남은 기존의 자본-노동 그리고 국가-노동의 협약이 깨진 사회라기보다는 이제야 이러한 협약을 정착시키고 있는 사회에 가깝다.

베트남도 세계화의 여러 모습인 정보 자본주의와 네트워크 사회, 소비 중심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 공동체가 약화하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회의 일면을 물론 가지고 있다. 베트남 사회가 선진 발전국가가 과거 걸었던 길을 답습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전 지구화가 가속화하고 세계 자본주의가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베트남은 소위 '압축적 근대성'(장경섭, 1998)을 체화해 나가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하여 베트남의 산업화와 산업노동자의 집단적 정체성을 논할 때 세계적 흐름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주조하는 산업발전 정도와 정치·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인 특히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지역정체성도 위로부터의 정책에 주목하고, 선진 사회로부터의 유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지역정체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V. 맺음말

이 글은 산업화 역사와 산업노동자의 경험이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베트남의 사례에 주목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 시론이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 다면성, 모호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두루 검토해 보고자 했다.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이 글을 방법론적 성찰과 모색으로 이끌었다. 이는 정체성 연구가 실재와 구성, 물질적 조건과 문화적 실천, 교차하는 다원적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정하고, 한정된 시간과 공간연구 내에서 연구 대상을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단순화하여 이 글에서는 연구

대상을 베트남의 산업화 역사와 산업노동자의 일상 경험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런 "조작적 접근(operational approach)"이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정체성을 어느 정도 해명해 주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했다고 믿는다.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동아시아 역내의 다른 국가를 경험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지역정체성을 성찰해 볼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부터였다. 특히 개혁개방 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부터는 베트남과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산업 관계가 점차 밀접해졌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 아래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다른 국가와 자본에 대한 경험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경험과 타자에 대한 감정, 인식, 견해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추정해 보기 위해 이 글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과 이주노동자의 한국 일터에 초점을 맞추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일하는 베트남 산업노동자는 삶터에서는 한국 경영진/매니저와 피상적 관계를 맺지만, 일터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밀접하게 접촉하고, 갈등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이 같은 상호 작용과 갈등은 계급적 차이에 토대를 두고 있음이 명백해 보였지만, 이들의 외국인 경영진/관리자에 대한 감정과 의식은 주로 계급이 아니라 민족/종족적인 담론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외국 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구조적 조건과 원인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역내 다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감으로 전이되고 확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가진 정체성의 이와 같은 가변성은 베트남이 정보 자본주의, 네트워크 사회, 후기 산업사회, 신자유주의 등으로 표상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가 낳는 복잡성, 양가성, 휘발성을 결합하여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 놓인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을 차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정책이나 선진적 사회의 경험에 천착하여 단순하게 유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성급한 시도보다는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처한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베트남

사회의 맥락에 맞추어 세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들의 지역정체성 함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함의를 담고자 노력했지만, 이 글이 여전히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지역정체성을 해명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 글은 구조적 조건, 경험, 정체성이 연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시사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문화정치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음을 느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의 여러 부분에서 제시한 의문점을 풀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지난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의 치기 어린 시도가 누군가의 비판적 성찰과 후속 작업을 통해 다듬어져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의 연구와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지역주의"(Acharya, 2003)를 모색하는 데 일조하기를 소망한다.

투고일: 2022년 10월 24일 | 심사일: 2022년 11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참고문헌

권율. 1999.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8권, 7-45.

_____. 2008.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한계."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지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211-243. 이매진.

김기석. 2015. 『동아시아공동체로의 머나먼 여정』. 인간사랑.

김윤진. 2022. "2022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 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July 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5318(검색일: 2022. 10. 23.).

도모노 로 저. 원용삼 역. 2013. 『정화의 대항해(상)』. 골든북미디어.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 평가와 관계." 2006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랑글레, 필립·꽈익 타인 떰 저. 윤대영 역. 2017.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진인진.

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국제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 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 제33집 겨울호, 819-849.

박배균.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관한 연구.『한국역사지리학회지』 10권(4), 통권 28호, 800-823.

박번순. 2008. “동아시아 통합과 기업의 역할: 역내 기업의 활동(직접투자)과 생산네트워의 확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지음.『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245-276. 이매진.

박사명. 2008.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지음.『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11-44. 이매진.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아시아리뷰』 1권 1호(창간호), 61-110.

뱅카테시, 슈다르 저. 문희경 역. 2013.『플로팅시티: 괴짜 사회학자, 뉴욕 지하경제를 탐사하다』. 어크로스.

설동훈. 1998.『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싱클레어, 존 저. 김창민 외 역. 2005.『문화제국주의를 탈중심화하기: 라틴 세계의 ‘텔레비시’와 ‘TV 글로부’』. 생각의 나무.

오하나. 2022. “베트남의 농촌개혁과 공업화 전개과정: 농민의 가구경제 다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월러스타인, 이매뉴얼 외 저. 김광식·여현덕 역. 1985,『세계체제론: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이해』. 학민사.

응웬마잉중. 2011. “베트남 북동부 8-18세기 동남아시아 해양루트: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의 여러 자료 연구를 중심으로.”『비교민속학』 46집, 136-159.

응웬반김. 2011. “문명과 제국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경로.”『비교민속학』 46집, 82-111.

이영석. 1996. “산업혁명과 세계체제론.” 한국 서양사학회 편.『근대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이해: 브로델과 월러스틴을 중심으로』, 208-243. 까치.

이충렬·박철한. 2008.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지음.『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277-308. 이매진.

이한우. 2011.『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장경섭. 1998.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비교사회』 2권, 371-414.

채수홍. 2003. “호치민시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인류학』 36권 2호, 143-182.

_____. 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교류.”『비교문화연구』 13

권 2호, 5-39.

_____. 2008.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황와 과제: 사회문화부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연구회 지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347-372. 이매진.

_____. 2013. “베트남 살쾡이 파업의 양상과 원인: 남부 빈즈엉(Binh Duong)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3권 2호, 1-48.

체이스 던, 크리스토퍼. 1985.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중심부 국가간의 경쟁이 미치는 효과.” 이매뉴얼 월러스타인 외. 김광식·여현덕 역. 『세계체제론: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이해』. 학민사, 169-185.

최형록. 2011. “정화(鄭和) 대항해와 해양 국가 및 해양 도시와의 교류 연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5호, 133-161.

카스텔, 마누엘.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정보시대 경제, 사회, 문화』. 한울 아카데미.

한국무역협회. 2021.

한국서양사학회 편. 1996. 『근대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이해: 브로델과 월러스틴을 중심으로』. 까치.

Acharya, Amitav. 2003. “Democratization and the Prospects for Participatory Regionalism in Southeast Asia.” *Third World Quarterly* 24(2), 375-390.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Penguin Books.

Burawoy, Michael and Janos Luckacs. 1992. *The Radiant Past: Ideology and Reality in Hungary's Road to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Verso.

Dung, Nguyen Duy. 2020. Đình Công ở Các Doanh Nghiệp FDI ở Việt Nam Thực Trạng, Nguyên Nhân và Giải Pháp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부문의 파업: 실태, 원인, 해결책].” *Nghiên Cứu Đông Bắc Á* [동북아연구] 2020 (9).

Emmerson, Donald. K.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1), 1-21.

Fforde, Adam and Stephan De Vylder. 1996.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 Westview Press.

Frobel, Folker, Jurgen Heinrichs, and Otto Kreye.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tructural Unemployment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uchs, C. 2009.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national Informational Capitalism." *Rethinking Marxism* 21(3), 387-402.

Harvey, Davi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London: Wiley-Blackwell.

Jovitt, Ken. 1992. *New World Disorder: The Lennist Extin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hac Vien, Nguyen and Huu Ngoc, eds. 1998. *From Saigon To Ho Chi Minh City: A Path Of 300 Years*. The Gioi Publishers.

Lee, Chang-Hee. 2006. *Industrial Rel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in Vietnam*. ILO Office in Vietnam. Hanoi.

McDowell, L. 2008. "Thinking through Work: Complex Inequalities, Constructions of Difference and Transnational Migrants." Progressive in Human Geography 32(4), 491-507.

Nash, June. 1981. "Ethnographic Aspects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0, 393-423.

Nguyễn, Thuy Linh. 2022. "Xuất khẩu lao đ ộng Việt Nam sang các nước và vùng lãnh thổ Đông Bắc Á : đ ặc đ iểm thị trường và thực trạng hoạt đ ộng (1992-2016)." Viện Hàn lâm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https://www.vass.gov.vn/noidung/tintuc/Lists/KhoaHocCongNghe/View_Detail.aspx?ViewAdmin=2020&ItemID=206#_ftnref7(검색일: 2022. 10. 23.).

Ortner, Sherry. 2011. "On Neoliberalism." *Anthropology of the Century: Current* Issue 1. http://aotcpress.com/articles/neoliberalism/(검색일: 2022. 10. 23.).

Petrasovits, Anna. 1988. Results and Limits in CMEA-Vietnamese Trade Relations, 1975-1985. David G. Marr and Christine P. White (eds.).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SEAP, 213-231.

Rothstein, F. A. and M. Blim. 1992. *Anthropology and the Global Factory: Studies of the New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Bergin: New York.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Pantheon Books.

Solheim II, Wilhelm G. 1985.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Another Point of View.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6(1), 141-147.

Tran, Ngoc Angie. 2014. *Ties that Bind: Cultural Identity, Class, and Law in Vietnam's Labor Resista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Tran, Tuyen and Tinh Doan. 2010. "Industrialization, Economic and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in Vietnam during Economic Transition."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Vo, Nhan Tri. 1990.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Willis, Paul. 1981.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Industrialization of Post-socialist Vietnam and East Asian Regional Identity

Suhong C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the ways that the industrialization of Vietnam ha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East Asian regional identity in Vietnam. For this purpose, first, I describe th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foreign countries before and after the reform policy called Doi Moi that conditioned the life of Vietnamese industrial workers. Second, I attempt to examine what and how the Vietnamese industrial workers have experienced everyday life under the given historical and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For the purpose, I describe ethnographically the experiences and consciousness of Vietnamese industrial workers in South Korean factories in Vietnam and South Korea. Third, based on the facts described previously, this article introspects the possibility, various facets, and fictitiousness of East Asian regional identity constructed for Vietnamese industrial workers.

Keywords | Vietnam, Industrialization, Reform policy (Doi Moi), East Asian Regional Identity, Identity Politics, Migrant Labor